



보도자료

영천
청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만희

2018. 10. 26.(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문의: 강성우 보좌관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함

-그러나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징계는 216건 중 32건,

14%에 불과, 나머지는 구두주의 및 기관의 징계회피로 확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농식품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특회계 융자금 및 이차보전사업,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해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정책자금 운영 금액은 2018년 기준 약 25조 1천억 원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농어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검사함.

<2018년 8월 기준 정책자금 검사 현황>

(단위 : 억원)

자금별	검사대상 기관				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농특회계	4,551	525	3,259	305	8,640
이차보전	166,145	31,594	3,203	177	201,119
축발기금	12,501	31	-	642	13,174
농안기금	14,784	-	-	-	14,784
FTA기금	5,837	-	-	-	5,837
대손보전	6,190	1,403	120	-	7,713
계	210,008	33,553	6,582	1,124	251,267

-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소홀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구 농어촌발전기금승계)

- 농금원은 '2004년부터 농특회계 융자금 및 농어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일반검사 및 기획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음.

- 정기검사 : 매분기 실시 (대여금 관리현황, 전 분기 검사지적 사항 사후관리 실태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 일반검사 : 연중 수시실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사업자의 융자금 사용실태 등)
- 기획검사 : 상·하반기 2회 실시 (취약분야 또는 특정사업 관련 대출취급기관 선정, 검사목적 등에 따라 항목 선정)

-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체 1,989개의 대출취급기관 중 170개(8.5%)의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대상 기관 및 검사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연 도	검사대상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실시기관	
	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기관수	실시율
2014	1,800	1,494	115	151	40	152	8.4
2015	1,826	1,520	117	150	39	152	8.3
2016	1,825	1,522	113	150	40	186	10.2
2017	1,939	1,615	119	141	64	235	12.1
2018.8	1,989	1,674	115	141	59	170	8.5
평균	-	-	-	-	-		9.50

-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를 정기·일반·기획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검사대상 기관수가 전체 대비 평균 9.5%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1,989개의 모든 대출취급기관이 1회씩 검사를 받는 데 만도 최소 9-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임.

- 무엇보다 최근 5년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취급 적발 건수가 매년 1천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함**

<유형별 대출취급기관 부당취급 현황>

(단위 : 억원)

지적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575	96	623	82	412	72	435	100	166	143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1	2	10	5	39	9	18	8	8	2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30	17	63	32	45	34	38	29	4	0.4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2	0.04	1	0.04	-	-	14	0.2	14	0.3
	소 계	618	115	697	119	496	115	505	137	192	145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05	61	163	48	183	119	206	94	121	151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507	62	678	78	436	62	373	64	161	26
	소 계	712	123	841	126	619	181	579	158	282	177
합 계		1,330	238	1,538	245	1,115	296	1,084	295	474	322

-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①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②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감사업무 실무지침(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관련자 문책요구 기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 과정에서 법령, 훈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등 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책을 요구한다.

-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문책 요구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견책 이상의 징계는 지난 5년간 32건(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관별 실제 조치 내역을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업 정책자금 관련 문책 요구 현황>

연 도	기 관	문책요구 조치결과(지적인원 기준)			
		계	징계(견책이상)	주의(구두경고)	기관별 실제 조치내역
2014	농협	34	-	34	30
2015	농협	14	-	14	11
2016	농협	52	4	48	48
	수협	4	-	4	4
	산림조합	7	-	7	3
2017	농협	62	12	50	47
2018.8	농협	40	16	24	12
	수협	3	-	3	3
합 계		216	32	184	158

* 미조치내역 : 퇴직자 19명, 표창 감경 등에 따른 미징계 9명, 조치진행중 30명(총 58명)

-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3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주의촉구)을 하고 있는 게 고작인 상황임.
-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은 “농업정책자금은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고질적인 부정취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